

경기,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제안

경기개발연구원은 2006년 경기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 및 의식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제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처리방식별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내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수의 총량은 2006년 현재 1,239톤/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대비 평균 108%의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양이 84%, 해양배출에 의해 처리하는 양이 약 16%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의 민간 자원화시설의 경우 서울시, 인천시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1,698톤/일로 전체 민간처리량의 73%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및 악취가 경기도 시·군의 환경문제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공공 자원화시설 중 비료생산업 및 사료제조업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자원화시설도 그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15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는 시설의 대부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기준치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소각과 다이옥신 발생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 15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

각열은 185만Gcal로 열 또는 전기 판매액이 연간 10,446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회수 및 재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처리기의 경우 발생원에서 배출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수거·운반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경제성이 높고 집중적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처리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기기의 성능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을 크게 자원화, 소각, 가정용처리기로 구분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가정용처리기기, 자원화시설, 소각시설의 순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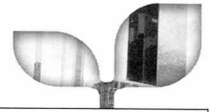
이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소각에 대한 의견은 공무원과 소각장 협의회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6.9%, 46.2%로 가장 많은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42.9%로 나타났다.

가장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 36.4%, 소각장 협의회 50%가 혼합 소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시민단체는 41.7%의 응답자가 가정용처리기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생활계폐기물과 함께 혼합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3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42%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 소각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퇴비화 45%, 사료화 25%, 지렁이퇴비



화 및 원형으로 농가이용이 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용 처리기기 7.6%, 소각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운반이 용이한 지역과 어려운 지역을 구분하여 다양한 처리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거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자원화 또는 혼합소각, 수거운반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나 수거운반 거리가 긴 지역은 가정용처리기기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대부분이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지만 강화된 해양배출 기준 및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감안하여 발생원에서 1차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타 시·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등록제도의 도입과 민간 처리시설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 자원화시설 중 비료생산업 및 사료제조업 등록현황은 전체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및 민간 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의 의무화로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활성화 및 관리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낮은 가동률 및 발열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는 조건하에 경기도 내 공공 대형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 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혼합소각의 고려를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 가정용 처리기기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한 발생원 처리방법의 활성화와 MBT(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새로운 처리방법의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경북, 7년 연속 치산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산림청이 주관한 2006년 치산사업(임도, 사방) 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5억원을 받게 되었다.

임도의 경우, 1999년부터 친환경 녹색 임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실행 주체를 기존의 시군에서 도로 변경한 뒤, 산림토목기술 공무원들이 특수공법을 개발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는 등, 자연과 어울리는 시공으로 임도의 질을 월등하게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사방 분야도 1970년대 낙동강 유역과 영일지구 특수사방 등 전국 최대면적의 황폐지를 복구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여 우리나라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녹화 성공국으로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경상북도가 2000년부터 치산사업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우수 3회 포함)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산림토목기술력이 전국 최고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광주, 중외공원에 '생태숲길' 조성키로

중외공원에 아기자기한 생태숲길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중외공원 일원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숲길을 조

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훼손이 심각한 기존 산책로에 노출된 나무 뿌리를 덮어주고 자연 친화적인 목재보행데크(510m)를 설치하여 보행에 만족감을 줄 계획이다.

또, 숲길 주변에 참나무와 수수꽃다리를 심고 큰 나무 아래는 맥문동, 상사화등 음지식물 5,000여본을 식재하는등 산책로 곳곳을 미니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숲속에서 생태환경을 관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숲길곳곳에 벤치와 피크닉탁자 21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은은한 빛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구간에 200여개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외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공원을 고르게 조성하고, 기존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가꾸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완·하남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은 경남기업이 51%를 투자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29%, 송촌종합건설과 광주시가 각각 19%와 1%를 부담한다.

대구시, 제2차 「푸른대구가꾸기사업」 시작

대구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제1차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데 이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동안 「제2차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

제1차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의 주요성과로서는 1,000만 그루의 나무심기 목표 달성과 국채보상

운동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등 도심공원 신설 및 재정비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담장허물기사업과 교통섬 녹음수 심기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구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신천을 아름답게 가꾼 것을 위시하여 혐오시설이었던 쓰레기매립장 위에 수목원과 산림문화전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사방댐과 임도건설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가는 수범사례들을 창의적으로 개발 추진하였으며, 2001년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정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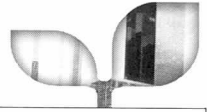
다른 기관단체에서 대구시의 좋은 시책들과 결과물을 견학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등 75개 단체에서 대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대구시는 제1차 푸른대구가꾸기사업 추진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398,249백만 원을 들여 아름다운 대구,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제2차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목표로서는 ① 담장없는 열린문화구현(OPEN CULTURE), ② 일상생활에서 즐길수 있는 생활권 녹지 및 공원 구현(JOY GREEN), ③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도시 구현(NATURE RECREATION), ④ 시민이 참여하는 젊은도시 구현(VIVA CITY)으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녹지율을 행정구역(884.46km²) 대비 0.2% 확충하기로 했으며, 이는 도심에 있는 국채보상기념운동공원의 40개정도를 만드는 규모이다.

또한 녹지정책도 나무심기 위주의 양적기능에서 질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며, 5년간 4백만 그루의 나무도 심을 계획이다. 시민들의 나무사랑



운동 전개를 위해 ①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자연 체험교실(식물체험 및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수강 등), ② 여름자연학교(천연염색, 목공예품 제작, 방학과제물과 연계한 현장 교육 등), ③ 건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나무이름알기, 우리 몸에 좋고 나쁜 식물분류 등), ④ 조경수 관리요령 교육(공동주택관리자 및 일반시민 등) 등과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녹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는 제2차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대구가 명실공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첫발 디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8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부산시 성장동력 산업화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의 일환으로 사업비 5천여만원을 투입,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타당성 분석 및 전략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 산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재)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해왔다.

동 연구용역은 국내·외 에너지정책 동향과 지역여건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부산시 성장동력 산업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영환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연구용역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항을 부산발전연구원 최윤찬 연구위원이 보고 및 심사위원들이 보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보고내용은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보급실태 ▲신·재생에너지원별 현황 및 발전전망 ▲부산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량 평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평가 ▲신·재생에너지 부산시 성장동력 산업화 추진전략 ▲중간보고회시 심의의견 반영사항 등이다.

서울, 새들의 둥지와 함께 알찬 겨울방학 보내자

서울시 푸른도시국 녹지사업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길동생태문화센터에서 '겨울방학 특별기획전(새들의 둥지)'를 연다. 모형, 박제, 음향, 해설판넬 등 시청각 전시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마련된 이번전시는 특히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집, 알 등을 통해 새의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지각색의 모양과 색으로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논병아리등 30여종의 알모형과 서울에서 보기 어려운 제비집과 박제, 딱따구리가 집으로 만들어놓은 구멍이 뚫린 나무는 특히 흥미있는 볼거리며, 직박구리 등 길동공원에서 볼 수 있는 새의 박제와 실물 둥지를 통해 사라져가는 새들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새소리를 구분해가며 흥미진진한 탐조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시기간 중 길동생태문화센터의 인기프로그램인 자연생태전문강좌가 월 2회 새를 주제로 진행되고 토, 일요일에는 새들을 소재로 한 자연다큐멘터리도 감상할 수 있다.

기획전을 비롯한 길동생태문화센터 관람은 무료이며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서울의 공원(parks.seoul.go.kr) 예약코너에서 월2회(10일, 25일) 선착순으로 받는다. ◀